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53 (2021. 07.)

[ISSUE]

- 01 국내외 기술동향 1
- 02 국내외 경제이슈 7
- 03 국내외 정책이슈 17

[FOCUS]

- 01 2030 이차전지 산업 24
(K-Battery)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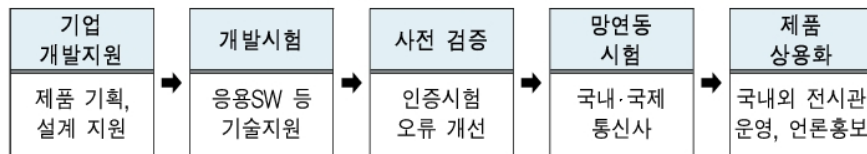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과기정통부, 세계 수준의 5세대(5G) 단말기 개발지원 기반시설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단말기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5G 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을 개최
 - 과기정통부와 구미시는 세계 수준의 5G 단말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 198억원을 투입하여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시험·검증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 5G NSA(Non stand alone; 4G-5G 연동모드) 및 5G SA(Stand alone; 5G 단독모드) 시험장비(코어 및 기지국)와 5G 단말기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환경 구축
 - '19~'20년까지는 3.5/28GHz 대역 비단독모드(NSA) 시험망 장비 구축 및 5G 시험 전용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21년도에는 국제표준 기반의 5G 단독모드(SA) 시험 장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예정
 - 이와 함께, 서울 구로 MFT(Mobile Field Testbed)센터에 엣지 컴퓨팅 장비를 설치하고, 구미 테스트베드와 연동하여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와 5G 초고속초저지연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성능검증 등도 병행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
- 5G 단말기 테스트베드에서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단말기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및 글로벌 주파수 대역에 맞는 5G 서비스 플랫폼 및 기지국을 통해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지원하게 됨
 - 이와 함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20년도에 기 구축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소·새싹기업의 지능형기기 개발을 전주기(기획 → 개발 → 시험검증 → 출시)로 지원하는 한편,
 -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통신사 망연동 시험 전에 단말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 상담 무료 제공 및 개발업체-전문인력간 1:1 연결을 통해 단시간내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할 예정

< 5G 단말기 개발 기술지원 절차 >



- 과기정통부는 5G 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상용망 연동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체류비용 절감,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시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단말기 제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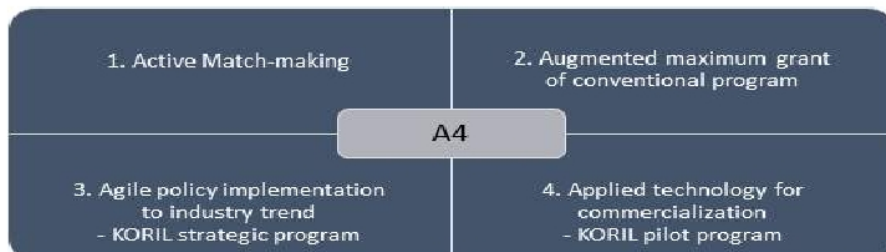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 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01년~)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있음
- 이번 이사회는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아펠바움 수석과학관이 수석대표로 이사회를 주재 하였으며, 한-이스라엘 재단 최태훈 사무총장, 서울대 김민수 교수 등 한국 측 이사진과 경제산업부 길 에레츠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드로르 빈 대표이사 등 이스라엘 측 이사진이 참석

<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요 >

- 목적 : 접수된 공동 R&D 과제 승인, 산업기술 협력 실적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시·장소 : '21.7.5(월) 15:00~19:00, 온라인(한국측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 참석 : (한) 산업부 김상모 국장, 한이재단 최태훈 사무총장, 서울대 김민수 교수
(이) 경제산업부 아미 아펠바움 수석과학관, 길 에레츠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드로르 빈 대표이사

-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 '21년 상반기에 접수된 양국 공동 연구 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 협력 활동을 논의
- * 주요 개정내용 : ①기금출자액 확대(각국 200→400만불), ②공동R&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50→70%), ③기금 지원범위를 공동R&D지원에서 인력교류 등 간접 활동까지 확대
-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기술 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



- ❶ 양국 관심주제 화상토론회 개최, 기업 아이디어 피칭 행사 마련,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기업의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파트너 발굴 프로세스를 강화



② 조약개정에 따른 공동기금 확대 등을 고려하여, 양국 공동 연구개발 지원금을 상향하고,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공동연구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효율적으로 개편

* [기존] 소형과제(총20만불), 대형과제(100만불)→[통합(안)] KORIL General program(200만불)
[기존] 타당성과제(총3만불)→[변경] 타당성과제(5만불)

③ 그간 추진해 온 기업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정책적 필요와 사전기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하향식(Top-down)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

* KORIL strategic program(안) : 최대 3년간 총 300만불, 특정분야 한정(바이오 등) 과제

④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실증, 유효성 현장 검증 등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

* KORIL pilot program(안) : 최대 1년간 총 100만불, 기술성숙도(TRL) 6~8단계 과제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공동R&D 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기존>	타당성과제	소형과제	대형과제				
지원한도	3만불	20만불	100만불				
지원특징	Pre-R&D	Short term R&D	Long term R&D				
지원형태	상향식(Bottom-up)	상향식(Bottom-up)	상향식(Bottom-up)				
<개편(안)>	타당성과제	KORIL-General	KORIL-Strategic	KORIL-Pilot			
지원한도	5만불	200만불	300만불	100만불			
지원특징	Pre-R&D	General R&D	특정 분야 지원	실증, 상용화지원			
지원형태	상향식(Bottom-up)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기술성숙도(TRL) 4/5 ~ 6					TRL 6 ~ 8		

- 한편, 이사회를 통해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도 승인
 - 한국 의료기기 기업 (주)힐세리온과 이스라엘 인공지능 시스템 기업 온사이트 메디칼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하여 현장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가이드 기반 초음파 진단기 공동 개발을 추진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주)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는 항암바이러스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세포 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
-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며,
 - 오늘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신규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서,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힘



대한민국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 * (주요국 순위) 미국(1위), 영국사우디(2위), 에스토니아(3위), 한국싱가폴스페인(4위), 러시아 UAE말레이시아(5위), 리투아니아(6위), 일본(7위), 캐나다(8위), 프랑스(9위), 인도(10위)
- 국제정보보호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격년으로 진행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사이버방역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음
-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
 - 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 하였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
-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 하였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 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
 - *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최근 순위 : '17년 13위(78.2점), '19년 15위(87.3점)

< 3차4차 세부 문항별 점수 비교 >

구분	3차	4차	증감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법적 제도 여부	18.2	20.0	1.8
(기술)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기술적 기관 및 틀(Framework)	18.7	19.54	0.48
(조직)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개발을 위한 정책기관과 전략	16.5	18.98	2.48
(역량)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인증된 전문가·공공기관 존재 여부	19.7	20.0	0.3
(협력) 파트너십, 협력 프레임워크, 정보공유 네트워크	14.2	20.0	5.8
합계	87.3	98.52	11.22

-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역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 3만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기반을 강화
 - 또한 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코로나19비대면 등에 힘입어 무인화 트렌드 확산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진전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유통 분야의 무인화 트렌드가 동반 확산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람 간 직접적 접촉없이 소비 가능하며 공간, 인력,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무인화 기술이 오프라인 유통 매장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주문·결제 등을 기계가 대신하는 키오스크 수준을 넘어 이제 고객 얼굴인식, 물품관리, 매장 내 돌발 상황 대응 역할까지 대신하는 단계로 발전
 - 나아가 지능형 CCTV, 클라우드 기반 딥러닝 영상분석 시스템, 무인출입 보안 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이 집약된 형태로 진화
- 시장조사업체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소매 시장규모는 '20년 216억달러에서 '25년 625억달러로 23.6%의 CAGR을 기록할 전망
 - 스마트 소매 시장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점포 운영 개선, 재고 관리, 새로운 소비자 경험 제공 분야 등이 포함
- 유통업계 공룡이자 ICT 시장 강자로 탈바꿈한 아마존은 '16년 미국 시애틀 본사에 첫 무인 매장 아마존 고 출점 후, '18년 1월 일반 소비자에게 개방
- 아마존 고 만족도와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료품점 매장 아마존 고 그로서리, 아마존 고 매장을 대형마트로 확장해 리브랜딩한 아마존 프레시까지 등장
 - 이들 무인 매장은 계산대 줄을 설 필요 없는 저스트 워크 아웃, 컴퓨터 비전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아마존웹서비스 기반 클라우드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 등이 핵심기술
 - 최첨단 카메라와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등이 매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구매 행위를 자동으로 인식 가능
- 또한 아마존은 배달 로봇을 활용한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

< 아마존 고, 아마존 그로서리 매장 모습 >



<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도입한 출입구 >



< 카트에 담긴 물건을 자동 계산하는 데시 카드 >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 국내에서는 편의점이 무인화에 적극적, 카페호텔 등 일상 생활 영역에서 확산
-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무인 운영 방식을 속속 도입
- 아직까지는 비대면 결제,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춰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이 주류

< 국내 주요 편의점의 무인 운영 도입 현황 >

구분	내용
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무인 편의점 테크 프렌들리 CU 오픈('21.1) - No counter, No wait, Just shopping 슬로건에 맞춰 점포 입장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
GS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인증과 결제에 자체 개발 솔루션 바이셀프 앱 활용 • 업계 최초로 무인 주류자판기 도입 예정
세븐일레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운영 • 일부 시그니처 매장은 정맥인증으로 결제 가능한 바이오페이 도입
이마트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시간 무인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확대 - 매장 출입 인증 시 최초 사용한 신용카드, 삼성페이를 적용했으나 금년 7월부터 네이버 앱 출입증 발급 가능, 카카오톡 지갑 QR 활용 가능
미니스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3월 무인 점포 테스트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매장 순차적 도입 준비

- 편의점 외 카페, 세탁소, 가전매장 등 다양한 다른 영역에서도 무인 점포 출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PC방) 인공지능 기술로 사전에 등록된 고객 얼굴을 인식한 뒤, 성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출입 허용
- (카페·호텔) 3D 공간맵핑과 자율주행 기술 등을 장착한 로봇이 테이블 간 좁은 통로를 이동하고 장애물을 회피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고객에게 음료 등 전달
- (백화점) 몇몇 백화점 식품관은 앱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 등록시 생성되는 QR 코드를 출입 인증으로 활용해 생필품, 각종 굶즈를 무인으로 판매. 매장 천장에는 비전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카메라를 배치해 고객 입장부터 동선을 추적관찰
- (대형가전 매장) LG베스트샵 무인 매장은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해 입장한 후 키오스크, 서빙봇 등을 배치해 고객의 자유로운 쇼핑 지원
- (은행) 인공지능 은행원이 등장하는 디지털 데스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편의점 등에 설치해 무인 서비스 확대 추진
- 우리 정부(중기부)는 동네슈퍼에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도입해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 추진
- 지역 상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나 보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동네 슈퍼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킨다는 취지
- 아울러 동네슈퍼 매출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산업부·KOTRA, 캄보디아에 프놈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21.06.28.)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0.11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21.2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등에 따라 한-캄 및 한-아세안 자유 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6월 28일, 캄보디아 프놈펜 KOTRA 무역관 내 자유 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를 개소
- 동 센터는 한-캄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21년 하반기 예정)에 앞서 우리 기업 들이 느끼는 원산지, 관세통관, 인증 관련 문의와 시장정보 요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소하게 됨
- 금번 개소식은 최근 코로나19가 동남아시아 확산됨에 따라 주캄 한국대사관 이혁상 경제담당 서기관, KOTRA 프놈펜 신종수 무역관장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으며, 뒤이어 산업부, KOTRA, 현지 진출 우리기업 등이 참여한 화상 간담회도 개최

○ 센터 현판식 : ①(장소) KOTRA 프놈펜 무역관, ②(시간) 15:00~15:30, ③(참석) 주캄 한국 대사관, 프놈펜 무역관,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표 등 4명
 ○ 화상 간담회 : ①(장소) 프놈펜 무역관, 산업부, KOTRA 본사, ②(시간) 16:00~17:00, ③(참석)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KOTRA 프놈펜 무역관장, KOTRA 통상지원팀장, 현지 진출기업 등 16명

- 이 자리에 참석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양국 간 경제·무역·문화 등 교류협력 강화와 함께 캄보디아 시장정보,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 발굴·해소, 적극적인 홍보 등을 우리 정부와 KOTRA에 건의
- 한-캄 자유무역협정은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7월부터 '21.2월까지 비대면 단기간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으며, 한-캄 양국은 '21.하반기 정식서명과 '22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내부적 절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한-캄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발효되면, 프놈펜 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과 캄보디아 바이어 대상 상담회·컨설팅 뿐만 아니라 양국 관세 기관 간 협의체, 무역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지 기업 밀집지역이나 주요 지방도시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등 자유무역 협정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
- 현재 캄보디아는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연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젊은 시장
- 산업부와 KOTRA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 8개국에 15개 자유무역협정 해외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06.29.)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
-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을 논의했으며,
-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1.6.29(화) 14:00~17:00, 무역협회
- 참석 : (정부) 산업부(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해수부(서면), 국토부(서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PMG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식품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의제 : ① 최근 對韓 수입규제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
② 비관세장벽 소관부처별 대응현황·성과 소개 및 업계 애로사항 논의

1.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했음
- '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1년 6월 총 28개국 216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 (신규조사 추이) ('17) 29건 → ('18) 25건 → ('19) 45건 → ('20) 38건 → ('21.6) 11건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9	12	8	1	11	5	106
화학	28	8	0	0	4	5	45
플라스틱·고무	16	1	0	0	3	1	21
섬유	9	1	0	0	3	1	14
전자전기	4	1	0	0	3	0	8
기타	8	3	0	0	7	4	22
합계	134	26	8	1	31	16	216
	160(74.1%)		9(4.2%)		47(21.7%)		

- 참석자들은 ①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②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③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
-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타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함
-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 * 예) 양자협약(산업부-EU(6.17)·영국(6.15))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함

2.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 및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
 - * (발표) 산업부, 식약처, 국표원,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 * (서면)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등에 따른 일부 국가의 규제 완화 현황을 공유

< 비관세장벽 완화 사례 >

사례명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특정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해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 • (대응) 한·인니 양자협약 계기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규모 매장 설립 제한 완화 등 요청 • (현황) 최근 인니정부는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투자제한 업종을 폐지하고 카지노 등 특수업종을 제외한 분야에 투자 개방
신규 화학제품 BIS인증 시행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인도 BIS인증 신규 적용 임박 • (대응현황) 국표원은 코로나로 인한 인증지연 등을 감안하여 일부 화학제품(아세톤 등 8종)에 대해 규제시행 유예를 요청 • (대응결과) 우리측이 요청한 8종의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시행을 연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 확보 <p>* ①아세톤(20.9.14→21.9.14, 12개월), ②무수프탈산(20.10→21.6, 8개월), ③탄살칼륨(20.6→22.3, 15개월), ④톨루엔/⑤테레프탈산(20.12→21.6, 6개월), ⑥스티렌/⑦아크릴로니트릴/⑧무수말레인산(21.5→21.11, 6개월)</p>

-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주무부처로서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 정부부처 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력 강화, WTO-FTA 이행위 등 양다자 채널 적극 활용, 국제규범 위반소지가 높은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효과적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1.06.30.)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6월 8일 발표된 美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상 규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
 -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의 미국내 생산 역량 확충, R&D 투자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국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제시
 -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8 출범)은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회의체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美 행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중 ①무역규범 집행 강화, ②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③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의 통상법적 합의와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3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6.30(수) 15:00~17:00,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 주제 : 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의 통상 규범적 논의
 ○ 참석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표인수 변호사(태평양),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 등

-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美 행정부 공급망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미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범 집행강화와 병행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의 진영화 양상은 미중 사이에 낀 많은 나라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서, 시장 논리에 기반한 기업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한편,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보다는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려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 정부도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21.07.1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일부 신흥국들을 제외한 70~80%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
-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세션3), 국제조세(세션5)에서 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세 공고화, 세계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
 - * 지속가능금융(세션4), 금융 이슈(세션6)은 한국은행 총재 발언
-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영국·이탈리아·아르헨티나·터키 등 5개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통해서 양자 현안과 디지털세 등 G20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 * 프랑스는 7월 1일(목), 화상면담 실시

【 회의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

(1) 세션1 : 세계경제와 보건(Global Economy and Health Challenge)

-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 보건 위기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공평한 백신 접근성 강화 필요 등에 공감대를 형성함
- 회원국들은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의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후속 작업을 촉구
 - * High Level Independent Panel on Financing the Global Commons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HLIP는 팬데믹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원 조성 및 위원회 등 신설*,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제안
 - * Global Health Threats Board / Global Health Threats Fund 신설 제안
 - ** 재무·보건 당국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 10월 재무·보건장관 회의 보고 예정
-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방역이 곧 경제인 만큼,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HLIP 검토가 시의적절함을 언급하고,
 - 세계경제가 직면한 팬데믹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연계를 강조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① 먼저, 선진국과 개도국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함을 제시

- 전염병·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전염병·기후문제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

② 다음으로 경제적 접근, 사회적 접근 간 연계를 강조

- 직면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관련 비용을 경제 시스템 내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

③ 셋째, 정부와 민간간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

-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2) 세션2 :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IMF SDR 일반배분*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방안의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IMF에 조속한 행동을 촉구

* SDR 일반배분은 글로벌 금융위기('09년 2,500억불) 이후 12년만에 처음

- 아울러 다수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채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채무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
-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

① 먼저, 진행중인 채무재조정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모범사례 창출, 저소득국 참여 촉진을 주장하고,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채무정보 공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언급

② IMF SDR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PRGT* 활용, 신탁기금 신설 등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도 IMF가 빠른 시일내 마련해주길 촉구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양허적 조건(현재 무이자)으로 지원하는 기금

③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개도국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탄력적 정책대응 인정 확대*, 관련 국제기구간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

* 자본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IMF 기관견해 재검토(금년말 예정) 시 인정확대 필요

** IMF 기관견해와 OECD 자본자유화 규약간의 일관성

(3) 세션3 :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the Recovery)

- 회원국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또 그린경제 관련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국가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도 언급함
-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인프라 투자, 기후 변화 대응방향과 거시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
 - ① 첫째,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Menu of Policy Options 제시를 환영
 - ② 둘째, 기후 대응에 있어 기존 제도와 정합성, 성장·고용·분배 영향 등 종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 또, 기후 대응은 추진 속도도 그 방향만큼 중요하므로,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될 것임을 언급
 - ③ 셋째, 거시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시정책(구조개혁 등)과의 조화, 질서 있는 출구전략(거시정책) 필요성도 강조
- (4) 세션5 :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
 -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
 - 또한 시행 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를 설명하고,
 -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되어있는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
 - 또 각국 정부는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함을 주장
 - 한편, 세션4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에서는 기후위험 등의 재무정보 반영을 위한 공시 제도 개선과 개도국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 등이 논의되었으며
 - 세션6 금융이슈(Financial Sector Issues)에서는 팬데믹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비은행금융기관, 단기자금시장 복원력·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
- 【 평가 및 대응방향 】**
 -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IMF SDR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탄소 가격제, 기후관련 재무공시) 등 G20내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
 -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10.14~15일), 정상회의(10.30~31일), COP26(10.31~11.12일) 등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마련, 적극 대응할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1.07.24.)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회 주요 증감내용 】

1. 국회 증액 +2.6조원

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원

○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①단가 대폭 인상, ②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③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①(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②(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③(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계	2,000~50				178	

○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0.5조원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 (+178만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table border="1"> <tr> <td>맞벌이 가구 1인 가구</td> <td>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td> </tr> </table>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국비 8.1)	11.0조원(국비 8.6)

③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0.5조원

-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바 유급휴가비 소요 보강(+2,467억원)
-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2,510억원)
-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 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270억원)
-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30억원)

④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0.2조원

-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 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내역

구분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본예산	'21년 1회 추경	(조원)	
					'21년 2회 추경안	'21년 2회 추경
◆ 총지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1.보건·복지· 고용	180.5	197.8	199.7	205.7	211.7	212.1
2.교육	72.6	71.0	71.2	71.4	77.8	77.8
3.문화·체육· 관광	8.0	8.1	8.5	8.7	8.8	8.8
4.환경	9.0	9.2	10.6	10.7	10.7	10.7
5.R&D	24.2	24.3	27.4	27.4	27.5	27.5
6.산업·중소 기업·에너지	23.7	35.5	28.6	35.9	39.7	40.1
7.SOC	23.2	22.9	26.5	26.5	26.5	26.6
8.농림·수산· 식품	21.5	21.4	22.7	22.9	23.0	23.0
9.국방	50.2	48.4	52.8	52.8	52.8	52.3
10.외교·통일	5.5	5.1	5.7	5.7	5.7	5.7
11.공공질서· 안전	20.8	20.7	22.3	22.3	22.3	22.3
12.일반·지방 행정	79.0	94.0	84.7	84.5	99.8	99.7



산업부-중기부,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관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
 -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
- ① **(산업현장 혁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함
 - **(스마트제조)**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과 산단 혁신데이터 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 **(탄소중립)**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기로 함
 - **(ESG)**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함
- ② **(수출판로)**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논의함
 -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추경 물류바우처 사업에 긴밀히 협업하고, 양 부처 산하 수출지원기관* 등이 함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브랜드-K 해외마케팅 등을 추진
-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 ③ **(업종별 협업과제)**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논의
 - ❶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분야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❷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팹리스-파운드리 협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❸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❹중기부 소부장 R&D사업과 산업부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사업 간 연계가점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신산업 트랙 신설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독과점,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기로 함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는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
-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
-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메뉴판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기업분담금 10%)
-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함
-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 18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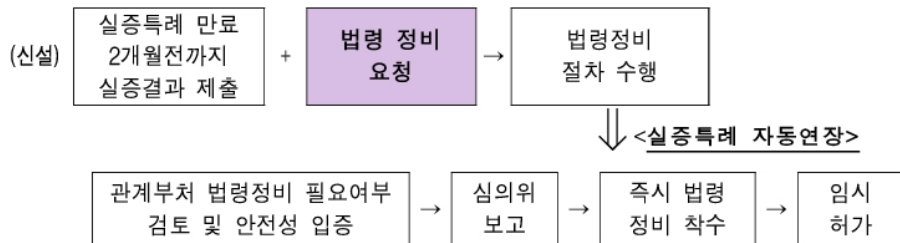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공포*하고 7월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 지역특구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1.7.20.)
- 기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
 -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
-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동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 * 중기부의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ict융합법(과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됨

【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샌드박스 공통) >

-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됨
 - *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증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부처에 법령정비 요청 가능
-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함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샌드박스 공통) >

-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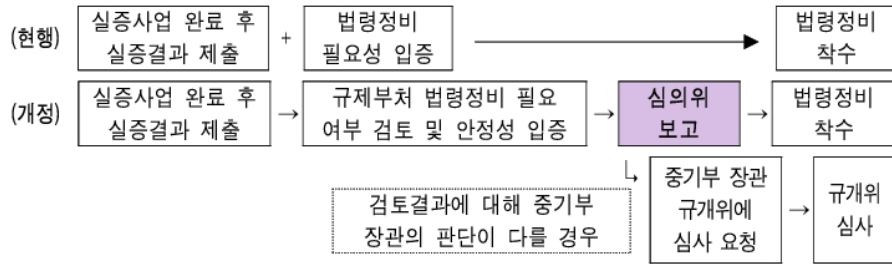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법령정비 요청 →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 중기부에서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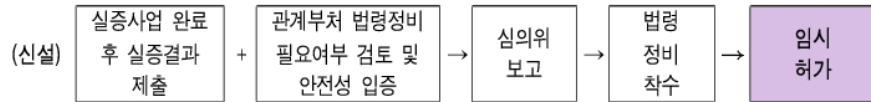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샌드박스 공통) >

□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

*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안전성 입증 시 승인)

**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

□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

□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

□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음

•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중기부 성낙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03

국내외
정책이슈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 규격화 지원방안 추진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힘
 -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 이에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우선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수출지원 등)에 따라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22억 → '21년 465억)하면서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성공사례 >

소형 전술차량('20)	소화기 야간표적지시기('18)	KM732 근접신관('17)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 적용	사거리 증대/무게 경량화	전자파 방해 능력 향상

- 이러한 규격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업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
 - * '21년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조기 추진(9월 예정)
- 또한,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일부 기능 개선도 추진
-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격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수출 개발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미래차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❶미래차 진출, ❷디지털전환, ❸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함
 -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누적 217개사),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
 - * 승인기업수(누적) : ('16)15→('17)66→('18)100→('19)109→('20)166→('21.7)217
 - * 승인기업수(연간) : ('16)15→('17)51→('18)34→('19)9→('20)57→('21.7)51
 -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
-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❶미래차, ❷디지털전환, ❸헬스케어 분야의 新 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
 - ❶ (미래차) 아이아(주)(주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차, (주)한송네오텍은 전기차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가 미래차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 ❷ (디지털전환) (주)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新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음
 - ❸ (헬스케어) (주)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음

<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

구분	기업명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미래차 (6)	자율차	아이아(주)	자동차 고무 쉘, 범퍼	자율차 웨더스트립 안전시스템
		(주)대성엘텍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	자율차 데이터 저장 시스템
		(주)디젠	차량용 전자부품	자율주행차 디지털 콕핏
		인팩일렉스(주)	차량용 안테나	자율주행차 안테나
		(주)엠씨넥스	모바일/차량용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차 인지 센서
	전기차	(주)한송네오텍	디스플레이 장비	딥러닝 기반 배터리 검사장비
디지털전환 (6)	(주)프론텍	자동차 부품(너트)·공구	IoT 기반 단조설비 통합관리	
	에이앤엘코퍼레이션(주)	차량용 스캐너	빅데이터기반 주차 공유 플랫폼	
	(주)퓨리움	방역 게이트	스마트 출입 통제, 빅데이터 분석	
	(주)맑음팩토리	그린월(벽면녹화)	IoT 기반 공간관리 솔루션	
	솔트웨어(주)	시스템 소프트웨어	IoT 기반 DIY 스마트팜	
헬스케어 (3)	아이알링크(주)	응용 소프트웨어	시음성인식 진료기록 솔루션	
	(주)세라젬	척추 온열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주)엠티스바이오	화장품	생체적합소재	
	(주)울스테크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인체조직 유래 의료기기	



•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승인유형) 과잉공급 완화, 신산업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2.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야	주요 지원내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 (등록면허세)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3/4분기 적용 금리(2.15+α)% •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Δ0.2~Δ0.7%p, (기은) Δ1%p, (기보) Δ0.2%p, (신보) 보증비율 90% 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100억원, '21년~) •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입지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3점)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1점)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상법: 2주) •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상법: 1개월) •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상법: 20일) •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상법: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공정거래법: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2년)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공정거래법: 6개월) •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2년)

01.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 (관계부처)

I. 추진배경

◆ 이차전지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등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 미래 산업의 변화는 전동화(Electrification)·무선화(Cordless)가 핵심, 모든 사물이 이차전지(Battery)로 움직이는 시대 개막
 - * 무선가전, 로봇, 드론,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적용영역 지속 확장
- 이차전지는 친환경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수단, 각국 수요 증가로 글로벌 시장 급속 성장 전망

◆ 대한민국 이차전지, 앞선 기술력을 기초로 글로벌 주도권 강화 필요

- 현행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91년 일본이 최초 상용화하며 시장을 형성
 - '0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산업 성장과 함께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
 - '10년대 들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대형 이차전지는 넓은 내수 시장의 중국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우리나라일본이 경쟁
 - * (中) 전기차 내수 시장 공급, (韓) 유럽미국 등 다양한 수요 공략, (日) 테슬라 납품
- 우리나라는 '97년부터 민관 공동 기술개발 결과 현재의 위상 확보, 향후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노력 필요
 - * ('97~'09) 중기거점 → ('10~'19) 녹색산업 선도형·WPM → (~'21) 차세대 이차전지 등 총 3,700억원

◆ 미래 산업 육성, 이차전지 강국 입지 강화,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추진

II. 국내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진단

◆ (성과) 소형 이차전지 10년 연속 세계 1위, 중·대형도 선두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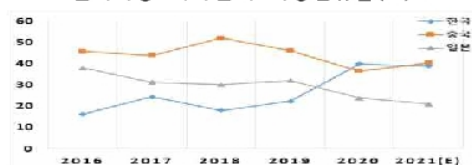
- (점유율) IT기기용 소형 이차전지는 '11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도 중국을 바짝 추격중

<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

구분	'19년	'20년	'21년(E)
IT	46.7(1위)	45.0(1위)	44.5(1위)
EV	22.1(3위)	39.8(1위)	38.7(2위)
ESS	66.5(1위)	70.5(1위)	72.7(1위)
총합	34.3(2위)	44.1(1위)	43.6(1위)

* 출처 : B3('21.4)

<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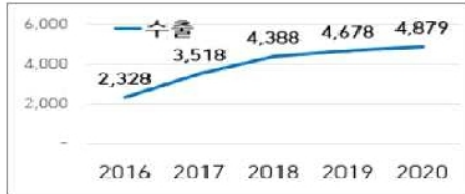
* 출처 : B3('21.4)

- (생산수출) 국내의 생산능력 5년간 4배 수준 확대('16년 58GWh → '20년 217GWh, 기업설문), 수출도 5년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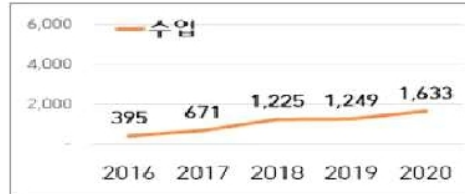


FOCUS

< 리튬이온전지 수출(백만불) >



< 리튬이온전지 수입(백만불) >



◆ (강점) 축적된 기술력 및 신시장 선도

- (기술력) 소형에서 중대형 이차전지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산업 성장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군을 보유
 -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에게 이차전지를 공급하는 기술력을 확보
- (시장선도) 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내수에 집중한 중국 기업 대비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 선점중

◆ (한계) 소재·부품·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

- (소부장) 이차전지 장비 부문의 국내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소재·부품은 여전히 해외의존도가 높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황
- (원재료) 이차전지 수요 확대로 원자재 및 1차 가공원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생산기반 확충 필요

III.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2030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대한민국																	
추진 전략	①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 민관 협력 대규모 R&D 추진 ②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 ⇒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③ 이차전지 시장 확대 ⇒ 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																	
세부 추진 과제	① 민관 대규모 R&D 추진 ②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튼튼한 생태계 조성 ③ 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	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조기 확보 ② 차세대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③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① 안정적인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②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③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 ④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제도기반 마련 ①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② 이차전지 수요기반 확대 ③ 이차전지 서비스 신산업 여건 조성																
기대 효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th> <th>2020년</th> <th>→</th> <th>2030년</th> </tr> </thead> <tbody> <tr> <td>이차전지 매출액</td> <td>22.7조원</td> <td></td> <td>166조원(세계시장 40%)</td> </tr> <tr> <td>소부장 매출액</td> <td>4.3조원</td> <td></td> <td>60조원(세계시장 20%)</td> </tr> <tr> <td>이차전지 수출액</td> <td>75억불</td> <td></td> <td>200억불</td> </tr> </tbody> </table>		2020년	→	2030년	이차전지 매출액	22.7조원		166조원(세계시장 40%)	소부장 매출액	4.3조원		60조원(세계시장 20%)	이차전지 수출액	75억불		200억불	
	2020년	→	2030년															
이차전지 매출액	22.7조원		166조원(세계시장 40%)															
소부장 매출액	4.3조원		60조원(세계시장 20%)															
이차전지 수출액	75억불		200억불															

Ⅳ. 세부 추진과제

(전략1)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

① 미래시장을 주도하는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기술 조기 확보

◆ 차세대전지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추진

- (차세대전지 제조)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27), 리튬황('25), 리튬금속('28) 등 차세대 전지군의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 결집
 - (민간) '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20.1조원)
 - (정부) 핵심 타겟제품 대상으로 시장맞춤형 대규모 R&D 지원
 -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신규예타 추진('23~'28, 산업부) 등
 - * 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 신규예타 내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미래원천기술연구('23~'30, 과기부)

< 이차전지 기술개발실증 로드맵(안) >

구분	'20년	'25~'28년	'30년
전고체	• 300Wh/kg급 파일롯셀	• 400Wh/kg급 상용화기술	• 차량 실증
리튬황	• 400Wh/kg급 파일롯셀 • 무인기(하이브리드) 실증	• 소형·플렉서블 전지개발 • 무인기용 상용화기술	• 비행체 적용
리튬금속	• 음극소재 개발	• 400Wh/kg급 상용화기술	• 차량 실증

②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병행

◆ 차세대전지 소부장 기술 선행 개발, 차차세대 원천기술 개발도 착수

◆ 차세대전지 연구·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 (차세대 소부장) 전극소재, 고체 전해질, 제조장비 등 차세대전지 상용화를 위한 분야별 요소 기술개발
 - ①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바탕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이온전도도, 수명, 안전성)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30여개 산학연 참여)
 - ② 리튬금속-공기전지, 다가이온 전지 등 차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유기물 기반 신개념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 추진
 - ③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외 7대 차세대소재*를 선정, 미래선도 품목에 단계적으로 포함하여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 * ①고체전해질, ②리튬금속 음극재, ③리튬황 양극재, ④리튬공기양극재, ⑤듀얼·다가이온 전지소재, ⑥레독스 커플, ⑦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
- (R&D 인프라)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실증평가를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 집중 지원
 - ① (시험제조) 차세대전지 완제품 시험제조를 위한 드라이룸 생산라인 구축
 - ② (실증평가) 셀 성능·신뢰성 평가 및 방폭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종합 지원
 - ③ (기업지원) 이차전지 소부장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사업화 지원



③ 리튬이온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

- **(고성능)** 주행거리(450→600km 이상), 수명(충방전 횟수 500→1,000회 이상), 고온신뢰성(45°C 이상) 등 성능고도화 소재, 생산성 확보 장비 개발 병행
 - ① 코발트 저감형 하이니켈 양극소재 개발(Ni 90%, Co 3% 이하), 고온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면처리 기술장비 개발
 - * 고신뢰성 차세대 니켈계 양극소재 개발('21~'23, 산업부)
 - ② 실리콘 음극소재(Si 10% 이상), 대량합성·연속공정 장비개발
 - * 고성능 이차전지 실리콘계 음극소재 및 제조장비 개발('21~'23, 산업부)
 - ③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대량생산 및 균일 분산 공정 기술개발 추진
- **(고안전)** 고안전성 이차전지 모듈, 지능형 제어기술 확보를 통해 발화 지연을 넘어 자가 진단·치유 가능한 이차전지 제조기술 개발
 - ^(1단계) 발화지연·확산방지를 위한 모듈 내 소화패치 탑재 → ^(2단계) 내부 온도·가스 등 이상 상황 감지 → ^(3단계) 자가억제·자가치유 기술개발
 - * 모듈내 소화패치를 탑재하는 고안전성 모듈소재 및 적용기술개발('21~'24, 산업부)
 - ** 자가감지·자가억제·자가치유 등 지능형 배터리 기술개발 예타 추진('24~'28, 산업부)
- **(고생산성)** 저탄소 공정, 디지털·스마트화 등 제조공정의 생산성 제고
 - 에너지 다소비 공정인 건조공정을 효율화하는 장비개발, 건조공정이 필요 없는 건식공정 개발로 친환경성 및 생산성 제고 동시 달성
 - 사·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제조공정 도입

(전략2)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광물자원 확보 강화 및 비축시스템 개선**

◆ **재활용 소재 활용을 국내 전기차 수요량 충족 수준으로 확대**

- **(원재료 확보)**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광물자원 확보 강화 및 비축 확대
 - ① **(기업지원)** 민간 기업의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 적극 지원
 - 해외자원개발의 사업성, 기술적 타당성, 법률·제도 등 기초조사 지원과 용자, 컨소시엄 구축 등 자금지원 확대 추진
 - ② **(정부간 협력강화)** 국가간 협력채널(산업·자원협력위 등) 확대, 자원수요국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민간 해외진출 기반 조성
 - 민간기업의 광물 부존국 광산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채광·분리·정련 등 원료·기초소재 기술 공동 R&D 모색
 - 미국·EU 등 수요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들과 다자양자 교류채널을 통해 정보·기술협력 강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발굴



FOCUS

- ③ (비축시스템 개선) 수급우려 품목인 코발트의 비축량을 2~3배 확대하는 등 희소금속 비축 확대 검토, 수급상황에 따른 활용전략 고도화
 - (재활용 소재) 이차전지 제조에 투입 가능한 원소재의 국내조달 확대
 - ① (설비구축)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핵심소재 공급을 위해 설비 구축 확대(민간)
- < 국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구축 전망(전지협회) >

구분	'20년	'25년	'30년
황산코발트	8,400톤/년	22,000톤/년	32,300톤/년
황산니켈	13,200톤/년	62,500톤/년	122,500톤/년
황산망간	2,400톤/년	7,100톤/년	10,800톤/년
수산화리튬	0톤/년	17,400톤/년	26,800톤/년

- ② (기술·공정 개발)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리튬 등의 재활용률 지속 제고
- ③ (이차전지 재활용) 주요 광물 물질흐름 분석 후 재활용 자원 데이터 축적, 광종별 재활용률 산정·관리
- ④ (기업육성)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지원제도('21.下 신설)를 통해 이차전지 광물 재활용기업 발굴, 금융·인력·R&D 등 종합 지원

② 이차전지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 ◆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 ◆ 국가전략기술 지정, 유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투자에 세제 등 지원
- (소부장 특화단지) 旣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집중 지원
 - ① (실증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고도 분석장비 구축을 통해 안정신뢰성 확보, 핵심소재 개발 지원
 - ② (협력 R&D) 앵커기업과 단지 내 소재부품기업 및 응용산업용 모듈팩 제조업체 간 협력 R&D 추진시 지원 강화
- (기술 자립) 대외의존도 높은 소부장 핵심품목의 자체 기술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핵심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 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혁신 장비개발
 - ② 수요기업 연계형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확대 추진
- (R&D 펀드) 정부·금융·산업계가 최소 800억원 규모의 R&D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이차전지 소부장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R&D 지원
- (투자지원) 국내기업의 설비·R&D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①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 →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공제
 - ② 첨단산업 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설비 투자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하여 유턴기업에 해당하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



FOCUS

- ③ 첨단투자지구 지정 검토, K-배터리 우대지원 프로그램 신설(수은 1.5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운용(산은) 등으로 투자 전폭 지원

(전략3)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시장 창출

1]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 ◆ 회수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화 센터 등을 통해 제품화도 지원
- (회수체계 마련) 전국 4개 권역*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고, 사용후 이차전지 운송, 보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21, 환경부)
 - * 수도권(시흥), 영남권(대구), 호남권(정읍), 충청권(홍성)
- (활용기반) 기업의 이차전지 선별(성능·안전성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나주·울산·포항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 확대 구축(산업·중기부)

<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 >

지역	제주	전남 나주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진천
구축	'19.10	'21.12	'21.12	'20.9	'20.5
연간 처리용량	(팩) 750대 (모듈) 6,000대	(팩) 1,250대 (모듈) 17,000대	(팩) 600대 (모듈) 1,400대	(팩) 2,400대 (모듈) 6,400대	(팩) 14,400대 (모듈) 14,400대

- (제품화) ESS, 전동카트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 및 제품 성능·안전성 평가 기술, 배터리 관리기술(BMS) 등 기술 이전
 - 산업화 센터 중심으로 응용제품별 적정 이차전지 선택, 제품 디자인, 제품 성능·안정성 개선 등 기업의 제품화 기술지원
 - 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의 안전성·사업성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20~'22) 5건 추진

2] 이차전지 수요기반 확대

- ◆ 공공ESS, 관공선 등 공공시장을 활용한 수요기반 확대
- ◆ 항공·선박·기계·철도 등 이차전지 적용 시장 확대 지원
- (공공 보급) 공공시장을 활용한 이차전지 수요 확대
 - ① (ESS) 계통안정화, 도서 마이크로그리드, 공공기관 설치의무 등 향후 5년('21~'25)간 2.2GWh 규모의 공공ESS 시장 창출
 - ② (선박) 관공선(총 388척)을 '30년까지 크기, 운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민간시장 창출 지원) 신규 수요산업에 적합한 이차전지 개발·실증 확대
 - ① (항공) 항공용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로 이차전지 시장수요 확대
 - 플라잉카(UAM·PAV)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용 이차전지(셀·패키징 등) 등 핵심부품 개발 지원
 - * 230Wh/kg급 배터리팩(패키징, 설계 및 시험평가 등) 개발('20~'23, 산업부)



FOCUS

- ② (선박) 차도선, 고래관광선 등 연안선박용 전기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국제운항 선박용 엔진-전동기-ESS 결합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및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
 - *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개발('20~'22), 선박용 ESS 패키징 개발('21~'23) 등
- ③ (기계) 건설기계용 이차전지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수요 확대
 - 전기 굴착기, 전기 지게차 등 국산화를 위해 고출력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계용 배터리팩 개발 지원
 - * 전기동력식 소형 건설산업장비용 50V/360V급 전기동력공급장치개발('21~'24, 산업부)
 - 전기 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대당 1,200만원~2,000만원) 지원
- ④ (철도) 도시철도차량 주행용 이차전지 개발실증을 통해 수요 창출
 - 무가선 트램 국가 R&D 부산 오륙도선 실증
 - * 무가선 트램 실증 R&D('17~'22, 국토부) → 이차전지 탑재 무가선 트램 '23년 개통예정
- ⑤ (PM) 1인용 이동수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
 - 전동보드 배터리를 별도 안전확인 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관리
 - PM용 중형 배터리의 안전신뢰성 평가 인프라 구축
 - * 마이크로 비클(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22~'25)

③ 이차전지 서비스 신산업 여건 조성

◆ 이차전지 데이터 활용 신산업, 이차전지 대여·교체 서비스 등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육성

- (데이터 플랫폼) 전기차 운행관리 전과정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주행·관리 데이터 기반으로 ①이차전지 성능개선, ②전기차 부품전환 지원, ③이차전지 관리, 맞춤형 보험·금융상품 등 신산업 창출 지원
- (이차전지 신산업) 이차전지 구매가 아닌 구독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정비 추진('22~)
 - ① (이차전지 대여) 이차전지를 차량과 구분하여 빌려쓰는 서비스 도입
 - 차량가격에서 이차전지(전기차 가격의 40% 수준) 가격을 제외하여 판매, 이차전지는 소비자에게 리스하는 이차전지 대여 시범사업 추진(~'22)
 - 택시서비스 대상 전기차 이차전지 대여모델의 사업성 집중 검증
 - ② (이차전지 교체) 충전 대기시간 없이 교체하는 서비스 도입
 - 전기 이륜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이차전지를 충전할 필요 없이 스테이션에서 완충된 이차전지로 교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 (이차전지 표준화) 교체형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체형 배터리팩 크기·형태·전압, 전원 커넥터 형태 등 표준화(산업부·국표원)
 - * (표준화) 개인이동수단용 전기차 이차전지 및 충전용 전력분배 표준화 기반 조성('20~'22, 국표원)
 - * (기술개발)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실증사업('21~'25) 내 세부과제